

디지털화와 공통적인 것*

하용삼**

| 국문초록 |

오늘날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면, 정치적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차이 그리고 국가·자본·공통적인 것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디지털 생산은 배타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생산·정치·경제·문화의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생산물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를 규정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누구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공통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네그리아 하트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누구나의 생산수단'·공통적인 것이 민주주의를 '누구나의 권력'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통적인 것과 평등은 '목적'이 되고 있다.

랑시에르에 있어서 국가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와 법 앞에 자객들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 말,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2071)

**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y-sha@hanmail.net)

국가는 공리의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자격들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개인들은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통적인 것을 통합하는 자치 공동체를 제도화할 수 있다.

주요어: 디지털화, 공통적인 것, 비물질적 생산물, 평등, 법

| 차례 |

1. 서문
2. 디지털화와 비물질적 생산물
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4. 말, 법 그리고 공통적인 것
5. 목적 혹은 전제로서 공통적인 것과 평등
6. 결론

1. 서문

현재 디지털 기술이 사회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1~3차 산업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발전이 바로 사회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수도 있으며, 혜택을 사유화하고 부의 기회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제도로 인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의지와 적절한 투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¹⁾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생산수단을 공적·사적으로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

1) K. Schwab,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이엽 옮김, 『제4차 산업혁명 더 빅스트』, 새로운 현재, 2018, 32쪽, 34쪽.

분의 이해 당사자들은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우리가 기술발전을 사회발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1~3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의 차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차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로 이행하는 핵심동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화에서 생산물은 사회적 협력·소통·지식·정동(affect)의 비물질적 생산물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가가 비물질적·사회적 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기 쉽지 않고, 노동자는 비물질적·사회적 생산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법적 근거이고, 이 소유권의 사용으로부터 배제된 모든 사람에 맞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특허권, 지적 재산권, 상표권을 통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로서 (디지털)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에서 부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원자적 개인은 (디지털)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자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원자적 개인, 국가, 자본, 공통적인 것,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 말, 법과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디지털화와 비물질적 생산물

디지털화는 생산성을 급격하게 발전시키고 있지만, 생산성에 비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²⁾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

2) 디지털화는 만물—문서, 뉴스, 음악, 사진, 동영상, 지도, 개인의 일상, 소셜네트워크, 정보 요청과 응답, 각종 감지기에서 나오는 자료 등—을 컴퓨터 및 유사 기기에 저장하고, 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비트(bit)로 바꾸는 작업이다.(E. Brynjolfsson·A.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이한음 옮김, 『제2의 기계시대』, 청림, 2014, 16쪽, 83~84쪽, 90쪽.) “현대 자본주의의 분석에 있어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경제 하위 부문 혹은 산업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메타트렌드로 작용하고 있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4).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기술 혁신의 새로운 물

에 소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소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소비 위기는 정치적 권리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디지털 합리화와 물류의 최적화로 경제적 생산성이 높아지면 새로운 직업을 얻는 사람보다 기존의 직업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와 함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의 점진적인 이익 이전만 생겨난다.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익이건, 소비 증가에 따른 이익이건 구매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즉 내수 시장에서 수요에 대응하는 증가 없이 경제의 체계적인 효율성만 가속화하는 것이다.”³⁾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디지털화가 전반적으로 일자리 축소를 가져오고 있고, 이 일자리 축소는 소비 위기를 발생시킨다. 한편으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소비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적 속박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단지 경제적으로 소비자로서만 기능을 한다면, 정치적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민중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면 그들의 동기와 진취적 정신이 고취되고, 이는 전쟁터나 공장에서 유용하다. ...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주어진 여성의 참정권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비슷하다. 하지만 21세기 남성과 여성 대다수는 군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잃을 것이다.”⁴⁾

오늘날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디지털 기술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속박

결을 경험하고 있는데, 첫째는 데이터 저장·처리·검색, 둘째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디지털 장치 보급 및 상호 연결성 증가, 셋째는 AI로 대변되는 지능형 알고리즘 개발이다.” (임운택,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와이론』 제45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8쪽.)

3) R. D. Precht, *Jäger, Hirten, Kritiker*, 박종대 옮김, 『사냥꾼, 목동, 비평가』, 열린책들, 2020, 289~290쪽.

4) Y. N. Harari, *Homo Deus*, 김명주 옮김,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7, 422~423쪽.

으로부터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상실이라는 상반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현재의 사회체제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국가·자본·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⁵⁾

현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원자적 개인이 되었다. 원자적 개인은 공적 주권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시민이 되었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의해서 임노동자로 되었다. 국가와 자본이 원자적 개인에게 공동체와 커먼즈(the commons)이고, ‘주체적 자연’과 ‘객체적 자연’이 된다.⁶⁾ 원자적 개인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정치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을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디지털 생산물을 공적·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오늘날 생산은 이중의 의미에서 점점 더 사회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협동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들에서 훨씬 더 사회적으로 생산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의 결과는 상품만이 아니라 사회관계이며

5)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the commons)는 “진 자본주의적으로 공유된 공간들”이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은 발견되었다기보다는 생산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공통적인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발전임을 강조한다.”(A. Negri·M. Hardt,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2008, 20쪽), “한편으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은 지구, 그리고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 즉 토지, 살림, 물, 공기, 광물 등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으로 “공통적인 것은 아이디어, 언어, 정동 같은 인간 노동과 창조성의 결과물을 가리키기도 한다.”(M. Hardt, “The Common in Communism”, 연구공간 L 옮김, 『공통적인 것과 코뮤니즘』, 연구공간 L 엮음,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난장, 2012, 34쪽.)

6) 마르크스는 ‘주체적 자연’을 “한 가족, 종족, 부족 등”이고, “그러다가 다른 것들과의 혼혈 및 대립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그는 객체적 자연을 “그 자신(생산자)의 무기적 현존, 그의 생산 및 재생산의 조건인 일정한 자연(예컨대 여기에서는 여전히 대지, 토지)”라고 말한다. (K. Marx, *Marx Engels Werke Bd. 42,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983, S. 398; K.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백의, 2000, 115쪽.)

궁극적으로 사회 자체이다.”⁷⁾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은 공적·사적 소유물이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협력·관계의 산물이고, 사회 자체, 인간 주체성, 공통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적·사적 소유를 넘어서는 공통적인 것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자본순환 도식이 성립하기 위한 역사적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순환 도식 $[G-W(A+Pm)\cdots P\cdots W'-G']$ ⁸⁾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 하나의 조건은 “자유노동과 화폐를 재생산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이 자유노동의 화폐와의 교환”으로서 “임노동”이고, 다른 조건은 “자유노동이 그것의 객체적 실현 조건들로부터 — 노동 수단 및 노동 재료로부터 — 분리되는 것”이다.⁹⁾ 자본순환 도식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등장과 더불어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사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국가의 법이 없다면, 자본순환 도식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매뉴팩처에서 대공업으로 진행되고, 노동은 전문(숙련)노동에서 대중(비숙련)노동으로 이행한다. 대중노동에서 노동의 추상화는 하나의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새로운 이동성, “노동의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성”을 구축한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삶정치”이다. 이것의 귀결은 “노동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입니다. 사실 전체 노동과정은 비물질노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몇몇 측면에서 비물질노동은 추상적 노동이 더 고차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¹⁰⁾ 그리고 자본

7) A. Negri·M. Hardt,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XV; A. Negri·M. Hardt, *Assembly*, 이성준·정유진 옮김, 『어셈블리』, 알렘, 2020, 25쪽.

8) G는 화폐, W는 상품, A는 노동력, Pm은 생산수단, P는 생산과정, W'는 처음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W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의 상품, G'는 W와 등가의 화폐이다. 사실상 자본순환 도식에서 G는 자본으로서 화폐이다.

9) K. Marx, op. cit., 1983, S. 383; K. Marx, 앞의 책 2000, 97쪽. 하용삼, 「공통적인 것과 공적·사적소유」, 『로컬리티 인문학』 제27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 169~170쪽 참조.

10) A. Negri, *Reflections on Empire*, 정남영·박서현 옮김, 『다중과 제국』, 갈무리, 2011, 115쪽.

주의 발전은 디지털화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 자체도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이 되고 있다. 하트는 농업·공업의 물질적 생산을 거쳐서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에 이르게 되고, 이 비물질적 생산이 전(前)자본주의의 커먼즈(communs)를 새로운 형태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으로 창조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생산물, 정동(affect), 이미지, 아이디어, 언어, 지식, 돌봄, 양육과 같은 사회적 협력에 의한 비물질적 생산에 있어서 생산자와 자신의 비물질적 생산물은 분리될 수 없다.

“한편으로 자본주의 생산이 점점 더 **삶정치적**으로 될 때조차, 즉 **인간 주체성의 생산이 가치창출의 중심부**가 될 때조차, 자본은 여전히 노동자의 몸과 마음이 상품(사고팔 수 있는 노동력)으로 변형되는 일을 필요로 한다. 노동력의 객관적 성격은 자본의 기능 및 그 이윤산출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며, 자본주의적 상상계는 이런 의미에서 산업 기계가 노동자를 이용하는 대공업의 주체-객체 관계에 여전히 묶여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삶정치적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적 주체성은 계산, 척도 및 대상화에 저항한다. 노동력으로서의 그들 활동의 구매와 판매가 산 노동으로서의 그들의 실제적인 육체적·지적 생산성을 점점 더 약화시킨다.”¹¹⁾

이런 점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산업적 훈육’과 ‘과학적 노동조직화’로 통제를 하면, 자본의 생산성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사회적·자율적 협력이 “증가된 생산성의 핵심임”을 수용한다. 그러나 “자본은 생산적 협력을 강제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물러나 생산과정 및 그 협력회로의 외부에서 사회가 상대적 자율성에 따라 생산한 가치를 **추출하는** 경향을 띤다.”¹²⁾ 자본가가 생산자의 신체를 사유화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이 특허권, 지적 재산권, 상품권에 의해서 소

11) A. Negri·M. Hardt, op. cit., 2019, pp.132~133;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240쪽 필자 강조.

12) A. Negri·M. Hardt, op. cit., 2019, p. 143;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257쪽.

유물로서 사유화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지만, “아이디어들, 이미지들, 정동들의 생산성이 최대로 실현되려면 그것들은 공통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공유되어야 한다. 사유화되는 경우 그것들의 생산성은 급격히 감소된다.”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에서 “생산력은 주체들로부터 태어나고 협동 안에서 조직됩니다. ... 생산적 협동은 자본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물질적 노동력의 능력, 스스로를 협동적 형태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언어적 노동의 능력에 기초하는 하는 것입니다.”¹³⁾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은 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배타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과 확장을 위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원래 물질적 소유권도 단순히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복수적·사회적 권리로 행사된다. 더욱이 비물질적 소유권은 경제·정치·문화에 더 복수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유권의 중심은 물질적 소유권에서 비물질적 소유권으로 이행하고 있다. “아이디어·이미지·문화·코드와 같은 비물질적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어떤 점에서는 즉각적으로 복수적이고 사회적이다. 비물질적 소유는, 네트워크 문화에 의해 열린 자유 및 협동의 형태와 더불어, 우리가 사회적 부와의 비소유적 관계를 맺을 잠재력—즉 평등한 접근과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부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감지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비소유적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 부를 공유할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¹⁴⁾

오늘날 디지털 비물질적 노동은 국가를 초월해서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13) M. Hardt, 앞의 책, 2012, 34쪽; A. Negri, 앞의 책, 2011, 102쪽. “강력하면서 유용한 인공지능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디지털 상호접속도 제2의 기계 시대를 더 가속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최근의 발전 사례다. 인류의 상황과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원은 71억 명이 달하는 세계 인류 자체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지구에서 더 즐겁게 살고,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다.”(E. Brynjolfsson·A. McAfee, 앞의 책, 2014, 121~122쪽.)

14) A. Negri·M. Hardt, op. cit., 2019, p. 90;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178쪽.

수행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노동이 사적 소유와 연결되는 경계가 점점 분명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특허법이 상상하듯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한 사람이 고립되어 노동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생산할 수 없다. 우리는 오로지 사회적으로 함께 생산할 뿐이다. 다시 말해 부는 계속 점점 늘어나는 노동 협력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있는 노동으로 생산”된다.¹⁵⁾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이 사회적 협력에 의한 삶정치적 생산이 될수록, 소비와 생산의 경계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의 경계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생산물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되기보다 오히려 ‘누구나의 생산수단’로서 공통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경향이 강할수록 대의민주주의의 국가는 노동과 사적 소유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명령할 것이다.

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원자적 개인의 전제가 된다.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국가가 자치 공동체의 역사적·사회적 연대와 분리된 원자적 개인의 전제가 된다. 사적인 영역의 경제 활동으로서 노동은 자본에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의 정치활동으로서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에만 매달리는 개인들의 생활방식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의 확대과정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정치공간과 사회적

15) A. Negri·M. Hardt, op. cit., 2019, p.93;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183쪽.

관계”가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개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욕망이나 필요성의 기하급수적인 증식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양자 간의 위치를 끊임없이 바꾸게 하는 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는 “거짓된 민주주의”일 뿐이다.¹⁶⁾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거짓된 민주주의에 살게 되었다. 사실상 “공통적인 것은 일체의 사회와 제도의 토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적인 것의 지배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그것을 순치하여 포섭·활용하는 것인바 공적인 것”으로 소유하는 거짓된 민주주의가 “바로 이 포섭의 형태인 것이다.”¹⁷⁾ 시민은 공적·사적 소유에 의해서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과 분리되었다. 시민은 원자적 개인이 되었고,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력으로서 임노동자가 되었다. 원자적 개인은 ‘비유기적 신체’로서 공통적인 것과 말, ‘관습과 민속법’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유대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원자적 개인은 대의민주주의의 국가의 공적 소유와 자본의 사적 소유에 지배된다.

이 조건에서 “자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이란 추상적 이상 뒤에 감춰진 이기적인 소유자로서 개인의 지배”이다. 또한 소비가 자본주의를 지우고, 개인주의가 계급투쟁을 지운다. 이에 반해 “‘인민의 권력’으로서 정치”는 “누구나의 권력”이고, “권력의 토대의 부재”이다. “정치는 공동체들을 통치할 권리를 부여하는 어떤 ‘능력’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16) J. Rancière, *La haine de la démocratie*, 허경 옮김,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인간사랑, 2011, 123~124쪽, 135~136쪽, 143쪽.

17) 윤영광, 「네그리의 공통주의와 공통적인 것」, 『범한철학』 제104집, 범한철학회, 2022, 221쪽.

18) J. Rancière, *Et tant pis pour les gens fatigués: Entretiens*, 박영옥 옮김,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인간사랑, 2020, 723~725쪽.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법적 토대이고, 마찬가지로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품권)의 토대이다. 부와 지식을 가진 집단(정치가와 관료)으로 구성된 국가는 '누구나의 권력'으로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

“국가의 행동은 항상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그 사용으로부터 배제된 모든 이들에 맞서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받는다. 아마도 그러한 국가의 강제력은 자기 재산이 방어되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배제당한 이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폭력 형태보다도 실제적이고 강력하다.”¹⁹⁾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에서 아이디어, 코드, 이미지, 문화생산물은 말·이성·법과 연결된 주체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의 생산수단'으로서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국가의 사적 소유권을 통해 공통적인 것으로서 비물질적 생산물을 '공유지 인클로저'와 '지대'의 방식으로 부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적 소유권은 자본가를 위한 국가의 숨겨진 기능이다. 자본의 증식은 국가의 사적 소유권 보장과 더불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국가의 법을 매개해서 자본을 증식하고,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에서 부를 추출한다.

4. 말, 법 그리고 공통적인 것

인간은 말을 하기 위해서 집단(종족집단, 공동체)을 형성해야 한다.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사회적 협력과 유대를 심화, 확대한다. 인간은 도그마로서 말을 통해 이성적인 존재가 된다. “개별자에 관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 그 자신은 한 인간 공동체의 자연적 구성원으로서만 언어에 대하여 자기

19) A. Negri·M. Hardt, op. cit., 2019, p. 104;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200쪽.

자신의 언어로서 관계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개별자의 산물로서 언어란 어불성설(Unding)이다. 그러나 소유도 마찬가지이다. 언어가 공동체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자체는 다른 점에서 보면 공동체의 현존이고, 공동체의 자명한 현존이다.”²⁰⁾ 마르크스는 ‘주체적 자연’으로서 공동체가 언어와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만약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말과 소유를 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언어의 입법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의미에 다가감으로써 이성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인간사회는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성을 가르치는 교사다.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조직은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며 말이 빚어내는 관계들로 만들어”진다. “모든 인간은 일단 법이 부여한 호적으로 구속되고, 이어 자신이 맺은 약속으로 구속된다.” “**법은** 인간 정신세계의 무한성을 물리적 경험의 유한성에 연결하고, 그럼으로써 **이성의 제도화**라는 인류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중세 이후로 서구의 국가는 입법자로서 “법의 원천이자 권리들의 원천”이다.²¹⁾

법은 “로고스(기억할 만한 말, 고려해야 할 썬)”의 제도화이다. “로고스는, 어떤 음성의 발음은 정당한 것을 발표하는 데 적합한 말로 이해되는 반면 다른 음성의 발음은 단지 쾌감이나 고통, 동의나 반항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음으로 지각되게 만드는 썬이기도 한 것이다.”²²⁾ 공동체의 신체적 기능의 차이에 대한 썬은 불평등, 그리고 공동체의 공통적인 것으로서 말은 평등을 의미한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국가도 법 앞에 자격들(부자, 자본가: 평민, 노동자)을 썬하는 지배의 장치이고, 동시에 법 앞에 자격들의 평

20) K. Marx, op. cit., 1983, S. 398; K. Marx, 앞의 책, 2000, 115~116쪽.

21) A. Supiot, *Homo juridicus*, 박제성·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아리, 2016, 14~17쪽, 34쪽 필자 강조.

22) J. Rancière, *La mésentente: Politique et philosophie*, 진태원 옮김, 『불화』, 길, 2015, 53~54쪽; J. Rancière, *Disagreement, Poitics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Julie Ro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pp.22~23.

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그것(지성의 평등의 가설)은 공리의 의미에서 전제이고, 그것은 검증될 수 있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전제의 두 수준이 있습니다. **논리적 함축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등의 가설은 불평등 그 자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언어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과 그가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명령도 실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찌 되었든 불평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원 불가능한 평등의 수준을 전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수준의 검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평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합니다.”²³⁾

국가는 자격들의 평등과 자본의 사적 소유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자본의 소유가 사적인 영역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피지배를 규정한다. 이 불평등이 있기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말의 제도화로서 법 앞에 자격들의 평등이 전제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는 존재이기에 그는 모든 다른 이들과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환영적 자유나 평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 혹은 평등은 언제나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잠재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급료, 노동시간, 일부 노동 조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시작했다.” “해방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핵심은 이해 가능성과 공동체의 공통 조건(the common prerequisite)으로서,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입증하려고 애써야 하는 전제로서 지적 능력의 평등을 상정하는 것이다.”²⁴⁾ 국가

23) J. Rancière, 앞의 책, 2020, 551~552쪽 필자 강조.

24) J. Rancière, *Aux Bords du Politique*,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110쪽, 116~117쪽; J. Rancière, *On the Shores of Politics*, Translated by Liz Heron, Verso, 2007, pp. 45~46, pp.50~51.

는 노동 현장의 노동자에게 잉여가치를 강제하는 ‘지배의 장치’이고, 동시에 현장 전문의 법 앞에 자격들의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국가가 지배와 해방의 장치이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는 전제로서 평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디지털) 비물질적 노동은 “주체들과 사회 운동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리하여 그들이 생산에 이르게 되는) 지적·소통적·관계적·정동적 활동의 총체”로 된다.²⁵⁾ “아주 최근까지도 특히 장거리에 걸친 빠른 통신, 정보 습득, 지식 공유는 본질적으로 일부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다. 지금은 훨씬 더 민주적이고 평등해졌으며, 계속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 제2의 기계 시대는 무수한 기계 지능들과 상호 연결된 수십억 개의 뇌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해간다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²⁶⁾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고, 동시에 공통적인 것이다. 디지털 생산물, 정동, 이미지, 아이디어, 지식, 말, 법은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이다. 근원적으로 말과 법은 사회적 생산물이고,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은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삶정치적 생산물이다. 그러므로 사적·공적 소유는 공통적인 것을 전제한다. 또한 자격들을 불평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말의 제도화로서 법 앞에서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는 자격들의 평등을 ‘전제’가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평등의 법적 근거로서 국가를 자본가들을 위한 지배 장치라고 파악하고 있다.

25) A. Negri, 앞의 책, 2011, 98쪽.

26) E. Brynjolfsson·A. McAfee, 앞의 책, 2014, 125쪽.

5. 목적 혹은 전제로서 공통적인 것과 평등

역사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공적·사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공통적인 것은 영국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공유지 인클로저에 의해서 사적 소유로 전환되고, 바다, 강, 산, 천연자원과 같은 공통적인 것이 공적 소유로 순치되어 사적 소유로 전환되고, 그리고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로서 (디지털)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이 소유권을 통해서 사적 소유로 전환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통적인 것을 사유재산으로 전유할 권리를 긍정한다. 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원칙이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축적은 점점 더 공통적인 것의 추출extraction을 통해, 즉 엄청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 공사, 거대한 광산사업, 단작 농업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또한 공통적인 것의 사회적 형태에서 생산된 가치—차세대 지식, 사회적 협력, 문화 생산물 등과 같은—의 추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²⁷⁾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국가가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로 전환한다. 이로써 자본가는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으로서 천연자원과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에서 부를 추출할 수 있다.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주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접근법은 생산자가 “이미 상대적으로 자율적일 뿐 아니라 더 자율적이게 될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공통적인 것의 접근을 개방적인 채로 두려고 하고 우리의 부를 민주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함께, 어떻게 서로 사회적으로 협력할지, 서로가 맺는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인간의 힘과 비인간의 힘, 사회적 기계와 디지털 기계,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 등의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낼지를 더 많

27) A. Negri·M. Hardt, op. cit., 2019, p.XVI;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25~26쪽.

이 결정할 수 있다. 이 입장에 서면 우리는 사실상 공통적인 것을 사유재산으로 변형하고 접근을 봉쇄하며 그 사용과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이 미래의 생산성에 족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식에 더 많이 접근할수록, 더 많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수록, 자원과 부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생산적이다.”²⁸⁾

디지털화에서 생산물은 말과 법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사적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본을 순환시키는 숨겨진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이런 국가의 기능으로 인하여 자본가는 사적 소유권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에서 부를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랑시에르는 “정보와 소통의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산출된 집단 지성의 형식들과 자신들의 단어를 가지고 이 생산에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긍정하는 남자들, 여자들의 집단적인 지성의 형식들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자본에 의해서 산출된 집단지성과 생산의 주체와 그의 소유물에 의해서 산출된 집단지성은 다른 것이라고 한다. 즉 그는 “생산 체계의 논리에 의해 산출된 지성은 항상 이 체계의 논리”에 속하고, 반대로 “혁명적인 집단 지성은 이 생산과 체계의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이 생산의 주체들(agents)의 집단적인 역량의 긍정”이라고 한다.²⁹⁾

랑시에르는 사회적 협력에 의해서 산출된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을 사적·공적 소유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그는 평등한 말이 불평등한 쉼의 전제이고, 공동체의 비물질적인 생산물·공통적인 것은 말과 법이고, 공통적인 것의 사적 소유와 법 앞에 평등이 국가의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한다. 국가는 소유의 불평등을 통해서 노동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장치이고, 또한 이 불평등의 전제로서 ‘법 앞에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따라서 공통적인 것으로 국가의 법은 사적 소유의 전제이다. 그러나 랑시에르

28) A. Negri·M. Hardt, op. cit., 2019, p.XVi;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26쪽.

29) J. Rancière, 앞의 책, 2020, 620쪽.

는 사적 소유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통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네그리와 하트는 국가를 단지 자본가를 위한 지배 장치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대안으로서 (디지털)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자와 장인은 폴리스의 신체적 기능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장소·시간에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장인과 정치가는 각각 폴리스의 신체적 기능에 맞는 장소와 시간에 있어야 한다. 폴리스의 신체적 기능에 따라서 생산자는 정치적 행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형태의 ‘비활동’을 대립시킨다. 그것은 두 형태의 시간성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휴식이 있다. 휴식은 일에 바쳐진 신체가 새로운 긴장에 앞서 필요로 하는 중지이자 이완이다. 그다음 여가가 있다. 여가는 노동의 구속에 예속되지 않는 자들이 갖는 자유 시간이다. 이제 이 비행위의 위계가 행위의 위계와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는 ‘능동적 인간’ 혹은 ‘자유로운 인간’이고, 매일매일 하는 일의 구속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이 ‘능동적’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 앞에 행위의 목적을 투사하거나 오로지 행위 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동적 인간이 수동적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들이 직접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동만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계적’ 인간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단의 세계, 필연의 세계에 얽매인 인간.”³⁰⁾

고대사회 이후로 지속적인 생산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노동자는 업무장소·시간 그리고 다음 날의 업무를 위한 휴식으로 이어지는 수동적 활동을 하고, 자유인은 여가와 정치적 행위를 위한 능동적 활동을 한

30) J. Rancière, *Modern Times*, 양창렬 옮김, 『모던 타임스』, 현실문화연구, 2018, 94쪽.

다. 자본가와 자유인은 우리가 좀 더 부유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자와 노예가 자신의 업무장소·시간에 머물러 수동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 사이의 위계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로운 위계가 자격들(자본가·자유인과 노동자·노예)의 평등에 도달할 수 없게 한다.

마르크스는 소외된 노동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이 유적 활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이 유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 ‘노동일의 단축’이 ‘근본조건’이다. “이(필연성의) 나라의 저편에서 비로소 자기목적(Selbstzweck)으로 간주되는 인간의 힘의 발전, 즉 참된 자유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러나 그것(참된 자유의 나라)은 오직 필연성의 나라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 노동일의 단축이 그 근본조건이다.”³¹⁾ 다시 말해 필연성의 나라 너머에 자유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성이 고도화되어서 노동자들의 평균 필요노동시간이 하루 3~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계적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자유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고 있다.³²⁾ 현대사회는 필연성의 나라와 자유의 나라 사이에 매번 새로운 시간성의 위계적 나눔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랑시에르는 자유인·자본가와 장인(노예)·노동자 사이의 시간성의 위계적 나눔이 단지 ‘노동일의 단축’이라는 경제적 필연성·‘치안적 경제’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³³⁾

“우리는 대서사의 시간을 벗어난 적이 없다. 지배에 대한 찬동을 설계하는 서사든 지배에 대한 항의를 표방하는 서사든 그것의 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허구 논리 안에 여전히 붙잡혀 있다. 즉 사건들

31) K. Marx, *Marx Engels Werke Bd. 25, Das Kapital III*, 1981. S. 828; K. Marx, *Das Kapital III*, 강신준 옮김, 『자본 III-2』, 길, 2014, 1095쪽, 필자 번역수정.

32) J. Rancière, 앞의 책, 2018, 95쪽.

33) 같은 책, 42~43쪽 참고.

의 필연적 연쇄 논리, 그 자체로 시간성의 위계적 나눔에 바탕을 두는 논리에 말이다. 이른바 굳림하는 ‘현재주의’의 영향 아래, 국가·금융·언론·과학의 모든 당국은 동일한 개인들을 전 지구적 시간의 정의에 종속시키는 동시에 이 시간에 맞서 꾸준히 잘못을 범하게끔 하는 이 간극을 즐기차게 생산하고 있다.”³⁴⁾

현대사회에서 자본가·정치가와 노동자라는 자격들이 시공간성의 위계적 나눔을 통해서 할당되고 있다. 물론 노동자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과 시간 후에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다음 날의 업무를 위해서 소비와 휴식을 하고, 업무의 시공간에 머물게 된다. 이에 반해 자본가·정치는 여가와 능동적 활동을 한다. 바로 이러한 시공간성의 위계적 나눔이 사회적 위계의 나눔으로 굳어지게 된다.

랑시에르는 자격들의 평등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다. 통상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노동을 수행하지만, 이 신문 《노동자들의 경종》의 소목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에 불일치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자신이 마루판을 깔고 있는 방의 작업을 끝마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의 배치를 마음에 들어 한다. 창이 정원으로로나 있거나 그림 같은 풍경이 내려다보이면, 그는 일순간 팔을 멈추고서 널찍한 전망을 향해 상상의 나라를 펴고 인근 주거 소유자들 이상으로 그 전망을 만끽한다.’ 팔에서 분리된, 그들의 순종적 활동 공간을 쪼개 거기에 자유로운 비활동 공간을 끼워 넣는 이 시선은 감각 능력의 두 체제 사이 충돌인 불일치를 잘 정의해준다. 이 충돌은 유능함을 다루는 ‘치안적’ 경제의 동요를 표시한다. 전망을 독차지하는 것은 이미 ‘기다려주지 않는 노동’의

34) 같은 책, 28~29쪽. 개인들의 전지구적 시간의 정의는 “노동력 재생산 시간과 잉여 가치 생산 시간으로 자기 분할 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착취 과정”의 시간이다. (같은 책, 30쪽.)

공간과는 다른 공간 속에서 자신의 현존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팔의 노동의 필연에 순종하는 자들과 시선의 자유를 소유한 자 사이의 나눔을 깨뜨리는 것이다.”³⁵⁾

폴리스와 근대 국가는 순종적 활동(노동)과 자유로운 비활동(여가)을 시공간성의 위계로 나누었다. 이에 반해 소목장이는 순종적 활동 공간과 시간에 자유로운 비활동 공간과 시간을 끼워 넣음으로써 ‘사회적 자리·직무·유능함에 대한 치안적 나눔’을 전복시킨다. 랑시에르는 불평등과 평등의 시공간성의 위계적 나눔을 인정하지 않고, 자격들의 평등을 공리의 의미에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는 이 위계적 나눔을 수용함으로써, 사적·공적 소유에 의한 불평등으로부터 ‘누구나의 생산수단’·공통적인 것에 의한 평등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불평등과 평등 사이의 시공간성의 위계적 나눔은 ‘치안적 나눔’으로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와 공통적인 것 사이의 시공간성의 위계적 나눔은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

6. 결론

오늘날 모든 사회체제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혜택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있지만, 일 자리를 줄이고 있다. 디지털화가 소비위기와 정치적 권리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소비위기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해결되면, 사람들은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정치적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1~3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디지털 기

35) J. Rancière, *Le spectateur émanancipé*, 양창렬 옮김, 『해방된 관객』, 현실문화연구, 2016, 87~88쪽.

술의 차이와 동시에 국가·자본·공통적인 것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1~3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자와 생산물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디지털화에서 생산물은 사회적 협력·지식·정동·말·이성으로 통합된 주체의 비물질적 생산물이다. 디지털화에서 생산물은 공적·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고, 사회 자체, 인간 주체성, 공통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화에서 생산자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적 소유의 법적 근거로서 자본순환의 숨겨진 중심축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생산과정 및 그 협력회로의 외부에서 소유권을 통해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의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

디지털화에서 비물질적 생산은 배타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생산의 경계 그리고 정치·경제·문화의 경계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생산물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되기보다 오히려 ‘누구나의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된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를 규정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누구나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민주주의와 배치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누구나의 생산수단’으로서 공통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근원적으로 말과 ‘말의 제도화’로서 법은 개인의 생산물이 아니라 ‘주체적 자연’으로서 공동체의 생산물이다. 그리고 말, 법, 정동, 이미지, 아이디어, 지식은 사회적 협력의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사적·공적 소유는 공통적인 것으로 법을 전제한다.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 ‘논리적 함축의 수준’, ‘언어의 이해’, 그리고 법에서 자격들(부자, 자본가: 평민, 노동자)의 ‘환원 불가능한 평등’이 전제된다.

네그리아 하트는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

고, 삶정치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의한 ‘누구나의 생산수단’·공통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공통적인 것의 관리와 돌봄의) 사회적 능력은 자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직접적인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³⁶⁾ 공통적인 것에 대한 관리와 돌봄의 능력은 경제활동이자 동시에 정치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수단이 누구나의 공통적인 것으로 됨으로써, 민주주의가 ‘누구나의 권력’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법을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를 다만 지배 장치로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공통적인 것과 평등은 시간적 간극을 가진 ‘목적’이 되고 있다.

랑시에르에 있어서 국가는 자본가를 위한 지배의 장치이고, 또한 노동자를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매뉴팩처와 대공업 시대의 국가는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의 지배를 규정하고, 동시에 현장 전문의 법 앞에 자격들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있기 위해서 공리의 의미에서 평등이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평등은 항상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잠재력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 현장에서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이 조건에서 노동자는 사적·공적 소유를 넘어서 공통적인 것의 자치 공동체를 제도화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디지털 생산물, 정동, 아이디어, 지식, 코드, 말, 법을 ‘공통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생산물, 정동, 이미지, 아이디어, 지식, 코드, 말, 법은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고, 공통적인 것이다. 국가는 공리의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자격들의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개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누구나의 권력’으로서 민주주의와 ‘누구나의 생산수단’으로서 공통적인 것을 통합하는 자치 공동체를 제도화할 수 있다.

36) A. Negri·M. Hardt, op. cit., 2019, p. XVI;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26쪽.

| 참고문헌 |

- 윤영광, 「네그리의 공통주의와 공통적인 것」, 『범한철학』 제104집, 범한철학회, 2022.
- 임운택,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와이론』 제45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 하용삼, 「공통적인 것과 공적·사적소유」, 『로컬리티 인문학』 제27호,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2022.
- Brynjolfsson, Erik·McAfee, Andrew, *The Second Machine Age*, 이한음 옮김, 『제2의 기계시대』, 청림, 2014.
- Harari, Yuval Noah., *Homo Deus*, 김명주 옮김,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7.
- Hardt, Michael, “The Common in Communism”, 연구공간 L 옮김, 「공통적인 것과 코뮤니즘」, 연구공간 L역음,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난장, 2012.
- Marx, Karl, *Marx Engels Werke Bd. 25, Das Kapital III*, 1981.
- _____, *Das Kapital III*, 강신준 옮김, 『자본 III-2』, 길, 2014.
- _____, *Marx Engels Werke Bd. 42,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983.
- _____,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백의, 2000.
- MEW :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 hrsg. v.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entralkomitee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Dietz Verlag, Berlin (Ost) 1956.
- Negri, Antonio, *Reflections on Empire*, 정남영·박서현 옮김, 『다중과 제국』 갈무리, 2011.
- Negri, Antonio·Hardt, Michael, *Multitude: War and Deomcracy in the Age of Empire*,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2008.
- _____,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_____, *Assembly*, 이승준·정유진 옮김, 『어셈블리』, 알렙, 2020.
- Precht, Richard David., *Jäger, Hirten, Kritiker*, 박종대 옮김, 『사냥꾼, 목동, 비평가』, 열린책들, 2020.
- Rancière, Jacques, *Aux Bords du Politique*,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 _____, *On the Shores of Politics*, Translated by Liz Heron, Verso, 2007.
- _____, *La haine de la démocratie*, 허경 옮김,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인간사랑, 2011.
- _____, *La mésentente: Politique et philosophie*, 진태원 옮김, 『불화: 정치와 철학』, 길, 2015.
- _____, *Disagreement, Poitics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Julie Ro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_____, *Le spectateur émanancipé*, 양창렬 옮김, 『해방된 관객』, 현실문화연구, 2016.
- _____, *The Emancipated Spectator*, Translated by Gregory Elliott, Verso, 2009.
- _____, *Modern Times*, 양창렬 옮김, 『모던 타임스』, 현실문화연구, 2018.
- _____, *Modern Times*, Translated by Gregory Elliott, Verso, 2022.
- _____, *Et tant pis pour les gens fatigués: Entretiens*, 박영옥 옮김,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 피곤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인간사랑, 2020.
- Schwab, Klaus,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이엽,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새로운현재, 2018.
- Supiot, Alain, *Homo juridicus*, 박제성·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아리, 2016.

Digitalisierung and the common

Ha, Yong-Sam

Today, people can be free from economic bondage through basic income. But when people lose their economic value, they can lose their political rights.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flicting problems, we must reveal th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al technology and digital technolo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capital, and the common.

Because digital production has no exclusivity or limitation, it does not have boundaries between consumption, productio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erefore, digital products can become the common rather than private ownership.

Capitalism defines capitalist domination in the workplace. In contrast, democracy is 'everyone's power'. Therefore, in a democracy, citizens can replac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with 'the common'.

Negri and Hardt say that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the common because they are products of social cooperation. They say that 'everyone's means of production' and the common can institutionalize democracy as 'everyone's power'. However, they do not recognize national laws as the common. For this reason, the common and equality are becoming 'purposes'.

For Rancière, the state stipulates the rule of capitalists in the workplace and the 'equality' of qualifications before the law.

However, Rancière does not recognize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 as 'the common.'

The state presupposes 'equality' of qualifications for the common in the sense of the axiom. On this premise, individuals can institutionalize an autonomous community that integrates democracy and the common through 'politics'.

Key Words: Digitalisierung, The common, Immaterial products,
Equality, The law

· 논문투고일: 2024년 2월 27일 · 심사완료일: 2024년 4월 18일 · 게재결정일: 2024년 4월 27일
